

**「 “때린 남편이 가져갈까봐 치료비 못 드려요”
까다로운 피해자 지원금」 보도 관련**
- 2026. 7. 3.자 조선일보 보도 관련 설명

상기 제하의 언론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확한 이해를 위해 알려드립니다.

□ 인천 거주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치료비 신청 후 한두달이 걸렸다는 내용 관련

- 해당 사건은, 인천 ○○경찰서 피해자지원 전담관이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*(이하 ‘인천센터’)에 전화로 관련 사건을 문의하였고, 인천센터는 피해자지원 전담관에게 인천센터로 연계할 것을 안내했으나, 피해자가 연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접수되지 않은 사건으로,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.

*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 사단법인으로서, 검찰과 별도로 치료비·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, 경찰·검찰 수사단계, 재판, 출소 이후 등 전 단계에서 피해자지원을 하고 있음

□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급되는 치료비, 생계비 액수 관련

- 범죄피해자보호기금상 지급되는 치료비·생계비 액수 관련, 치료비는 연간 최대 1,500만 원, 총 5,000만 원 한도로 지급되고, 생계비는 1인 가족 기준 월 70만 원(4인 가족의 경우 월 200만 원),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가능합니다.

□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, 생계비가 법무부에 할당된 범죄피해자지원기금에서 나온다는 점 관련

-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 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(직원 인건비, 센터당 평균 1~2명분) 뿐으로, 치료비·생계비 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회원들이 납입한 회비 등 센터 자체 재원으로 이루어집니다.

□ 치료비, 생계비 지원은 법무부 소관이므로 행안부 소속인 경찰 단계 사건은 지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 관련

- 검찰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치료비·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의뢰 시기, 의뢰 기관과 무관하게 요건에 해당하면 모두 지원대상이 되고, 실제 지원 사례를 분석하면, 경찰 단계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비중이 높습니다.

*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,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, 대전 공장 폭발 사건 등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지원에 착수하여 신속히 집행이 완료된 사례 다수

□ 경찰이 ‘범죄피해자보호기금 신청 현황’을 분석했더니, 신청 후 지급까지 생계비는 53.2일, 치료비는 80.1일 뒤에야 지원이 이뤄졌다는 내용 관련

- 검찰의 치료비·생계비 지원 관련 신청(접수)시부터 지급시까지 소요된 기간은 경찰 의뢰 사례를 포함하여 평균 29일로, 위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를 것을 알려드립니다.
- 한편, 치료비 지원은 피해자가 지출한 실비를 보전해 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,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지급보증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
- 생계비는 생계곤란의 사정 등 규정상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결정하며,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3일 내에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.

□ 법무부의 생계비·치료비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심사 통과가 어렵다는 내용 관련

-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, 피해자 거주지, 소득요건 등은 피해사실 내용 파악, 지원기관의 관할,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(생계비의 경우) 등 판단을 위한 것으로, 실제 심사는 법령·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-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은 전화·이메일·팩스 등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고, 친족간 범죄의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귀착우려가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, 치료비 지급시에는 소득 등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.
-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치료비·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5주 이상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
- 최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상 치료비·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관련 신청 건수 대비 인용율은 약 93%에 달합니다('24.~'25. 기준).

□ 법무부에서는 ‘범죄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’ 구축을 통한 지원 효율화 추진중

- 법무부는 경찰, 검찰, 범죄피해자지원센터, 성평등가족부, 보건복지부 등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피해자 지원 신청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.

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인권국 인권구조과	책임자	과 장	반지 (02-2110-3641)
		담당자	검 사	강민정 (02-2110-4252)

